

行政學科의 當面課題

趙 昌 鉉

(漢陽大 行政學科)

I. 머리말

行政學이라고 하는 학문이 韓國에 소개된 지 불과 30년 만에 全國大學 중 50여 개 대학에 行政 學科가 설치되었고 10여 개의 行政 大學院에서 수백 명의 行政 學碩士가 나오는가 하면 1985年 前期 博士學位授與者 889명 중에 12명이 行政 學博士 였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급속도로 伸張해 나가고 있는 行政 學의 當面課題임과 동시에 行政 學에 던져진 하나의 挑戰이라 하겠다.

行政 學이 발생한 美國에 있어서는 行政 學의 學問的 危機를 부르짖은 지 이미 오래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 韓國에서 비교적 無難(?)하게 成長하고 있는 行政 學의 學問的 그리고 教育的 位置를 조심스럽게 再評價해 보는 것도 자못 뜻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여기에 몇 가지를 거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은 전적으로 어떠한 科學的 現地調查에 의해 결론지어진 研究가 아니며 이미 發刊된 몇 편의 論文에 의해 알려진 資料(?)를 筆者 임의로 引用해서 작성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評價基準은 筆者が 外國에서 들아온 후 가르친 近二十年간의 經驗과 美國의 行政 學學校聯合會(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NASPAA)에서 발간한 「行政學學士, 碩士 및 博士學位 ‘프로그램’을 위한 指針 및 基準(Guidelines and Standards for Baccalaureate, Professional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in Public Affairs/Public Administration)」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또 한 가지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筆者가 지적하고 제안하는 것도 現實을 制約하는 여러 가지 狀況들에 대해서 無知하거나 또는 무감각해서라기보다 行政 學의 보다 알찬 發展을 위해서는 늘 필요한 ‘他山之石’이 되고자 함에 있다.

II. 무엇이 문제인가?

行政 學科가 당면하고 있는 課題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行政 學科의 實態를 개괄적으로나마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럼 다음의 순서로 行政 學과의 실태를 간략하나마 살펴보기로 하자.

1. 教科課程의 實態

1) 科目的 지나친 細分化 현상
우선 한 調查結果¹⁾에 의하면 行政 學科에 최고 37개, 최소 30개의 科目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1) 尹在豐·金明守, “韓國 大學 行政 學科의 모델 教科課程 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行政學報, 第16號(1982), pp. 63~91.

다. 또 科目名으로 보면 169개나 되는 다른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²⁾ 이것은 너무 많은 과목임에 틀림없다. 물론 行政學의 隣接學問科目들을 講授했다 하더라도 행정학의 學士課程에 이처럼 많은 과목이 설정되고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유사한 과목의 重複, 增殖(proliferation)에 의한 현상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행정학 과목 중에서만도 基礎分野에 19, 管理分野에 26, 政策·發展分野에 38, 調査 및 計量技法分野에 8개의 과목이 설정된 것은³⁾ 실로 놀라운 일로서 비록 大學院課目까지 포함했다손치더라도 지나친 細分化임에 틀림없다.

2) 行政學教育에 포함된 隣接學問의 比重 위의 調査에 의하면 ① 行政學 60.39% ② 法學 21.58% ③ 政治學 5.51% ④ 經濟學 7.68% ⑤ 기타 隣接學問 4.84%로 되어 있는데⁴⁾ 이것은 行政學教育이 綜合應用社會科學이기 때문에 첫째 行政學과 기타 隣接社會科學과의 비중, 둘째 기타 隣接社會科學間의 比重이라는 觀點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行政學과 기타 隣接社會科學間의 비중이 약 60 대 4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配分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40%를 차지하는 隣接社會科學間의 배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法學이 차지하는 비중이 21.58%, 즉 인접 사회과학의 절반 이상을 法學科目이 차지한다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行政學徒들이 進出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할 각종 考試科目에 法學科目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行政學徒로서 가져야 할 基本的 인접 사회과학의 最少限의 知識과 理解라는 차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經濟學보다 政治學의 비중이 더 작은 점은 行政과 政治의 分離論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行政學의 理解에 키다간 취약 점이 아닐 수 없다. 무릇 모든 行政은 政治의 延長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 올바른 政治의 理解와 素養이 절대로 필요함은 굳이 여기서 강조할 필요

가 없다 하겠다.

세제로 社會學, 社會心理學, 心理學의 비중이 위의 調査에는 빌드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비록 이러한 인접 사회과학이 기타 4.84%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比重은 너무나 미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行政學分野의 教科目 內容

앞서 말한 調査는 行政學의 분야를 4분하여 ① 基礎分野 ② 管理分野 ③ 政策分野 ④ 方法論分野로 나눴는데⁵⁾ 그 내용을 살펴보면 行政哲學, 行政學史 등을 위시한 多樣하고 細分化된 과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막상 行政學 教育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個人·集團 및 組織의 動態論(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al dynamics)에 대한 과목들이 거의 없거나 불과 몇 개의 과목으로 이 분야를 담당하려는 듯 싶다. 이것은 오늘날 行政學의 가장重要な 분야인 人的要素(human factor)를 輕視하는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균형 있는 行政人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行政학의 각 분야를 꿀고루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학의 教科目 內容 중에서 또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行政학 과목들이 韓國을 素材로 한 과목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기껏 헤아 韓國行政論이 고작이고, 韓國行政史, 韓國地方行政論, 韓國都市行政論 등의 과목들이 빠져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行政학이 外國의 文獻을 그대로 소개하는 데 그치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지!

행정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地域學(area studies)이다. 行政의 行態와 政策을 그 내용으로 하는 行政학이 어떻게 그것이 발달고 서 있는 땅(地域)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行政學은 韓國이라는 땅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일어날 行政의 現象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努力이어야 한다. 외국의 學說은 우리의 研究를 위한 方法論的 參考(methodological

2) 上揭書, p. 68.

3) 上揭書, p. 67.

4) 上揭書, p. 68.

5) 上揭書, p. 71.

reference)에 불과해야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현상을 說明할 수 있는 것처럼 一般理論화(generalize)시키는 속단은 禁物이다.

물론 比較行政學은 行政학의 一般理論화를 위한前提的學問으로서 떨달리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선 지나친 外國의 學說依存은 行政학이 理論과 實際를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本意 아닌 과오를 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4) ‘인턴쉽(internship)’의 不在

다른 학문과 달리 行政學에서 實務經驗을 學科課程의一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醫大教育이 ‘인턴쉽’ 없이 완성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行政학의 學部課程이 醫師와 등등한 專門職을 양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實務經驗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教育訓練의 일부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行政學 教科目에 ‘인턴쉽’이 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教授 자신들도 대부분이 전혀 行政經驗이 없는 분들이고 보면 韓國 行政學이 얼마나 現實과 등을 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둘째로 行政學科가 당면한 課題로서 우리의 教授陣을 살펴보기로 하자.

2. 行政學教授陣

1) 過多한 講義時間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모든 大學教授들이 共通의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많은 講義時間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行政學科도 예외는 아니어서 平均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많은 시간을 學部에서만 가르친다고 해도 無理인데 碩士는 물론 博士課程까지 포함해서 그리니 얼마나 教授가 힘이 드는가 하는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그토록 많은 시간을 가르치다 보니 反復되는 내용이 많게 되며 언제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의심이 된다. 혼히 大學講義時間數를 勞動時間과 同一視하여 우리나라 平均 勞動時間이 45시간(週當)인 것에 비춰 볼 때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이것은 大學講義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적어도 한 시간 講義를 하기 위해서는 세 시간 내지는 네 시간의 準備가 필요함을 여기서 구태여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준비가 충분치 못한 강의는 教科書를 읽어나가는 식의 강의이거나 또는 몇 해를 거듭해도 내용을 更新할 데 모르는 녹음기와 같은 反復되는 강의일 수밖에 없다.

2) 學問의 同族繁殖(academic inbreeding)

이것은 優生學의으로 이미 증명된 “同族繁殖(inbreeding)은 劣等兒를 낳는다”는 原理가 우리 學問에도 同一하게 적용된다고 믿는 데서 나온 基準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大學들의 대부분의 學科가 예외 없이 실시하고 있는 이 學問의 同族繁殖 현상은 學問의 國際化·普遍化를 위해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현상인데 우리 行政學科의 實情은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한 편이라는 소리가 드높다.

그것은 다른 학문 특히 社會科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導入된 경위부터가 政府主導形式이었고一方的으로 한 학교에서 大量生產해 놓고 보니 자연히 그렇게 된 原因도 있겠지만, 그 후에 생긴 大學들도 마찬가지로 自己學校 출신 教授志望生을 他校出身보다 優先的으로 採用하는 일종의 不文律에 의해 이러한 ‘아카데믹 인브리딩’ 현상은 全國的으로 번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態度는 美國이 뒤늦게 밭비둥치고 있는 保護무역주의의 현상과도 같아서 “質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 物件을 씨야겠다”는 심산인데 이것이 物件을 얘기할 때는 다소 수긍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學問을 하는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保護무역주의적 發想은 위험하기 짜이 없는 것이다. 물론 그結果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或者는 이러한 ‘아카데믹 인브리딩’이 容納될 수 있는 것으로 변명할지 모르나, 先進諸國의 學問의 傳統과 歷史가 이것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쉽사리 넘겨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3) 官學協同의 厥忌 또는 不在

우리나라의 學界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學問의 獨立과 純粹性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政府의 用役이나 官學協同活動까지를 御用化하여 自限視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것은 적어도 行

政學의 發達과 行政學徒의 궁극적 機能을 저해하는 극히 편협한 態度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말한 必要도 없이 어떠한 活動(그것이 學問的인 것이나 또는 非學問的인 것이거나를 상관할 것이 없이)에 있어서도 實質과 正直은 사람이 해야 될 基本姿勢일진데 비단 그것이 學問의 인 활동에서만 더 강조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위낙 世上이 혐하고 不正이 활개를 치는 社會이 이기에 그리한 파ing 보호적 배도를 갖는 것이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학의 전수인 行政實務에 대한 調查研究作業인 用役을 모두 御用學者의 作態로 보는 視角 또한 修正을 필요로 한다 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政府用役이 不誠實하던 했지 不正과 虛構로 찬 御用의 學問의 實質化(prostitutionalization of a discipline)는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政府는 정부대로 短期的, 實用的 利用價值가 없다고 해서 문제의 좀더 根本的, 長期的 研究를 위한 努力を 게울리 해서도 안 되겠다.

지금의 우리 行政學界와 政府와의 關係는 피차가 서로를 경제하는 서먹서먹한 處地가 아닌가 한다. 이것은 兩者가 피차를 필요로 하는 官學協同 없이는 양자 중 누구도 生存할 수 없음을 再認識해야 할 것을 問題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4) 教授再任用制의 不合理性

물론 教授再任用制度가舊時代의 政治體制下에서 탄생했고 그것이 惡用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충대한 의미가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筆者가關心을 갖는 것은 教授要員으로 任用되는 과정에서 교수로서의 一般的 資質(人格, 品行, 學問의 正直性, 높은 知能 등)을 갖춘 사람을 助教授로부터 시작해서 正教授가 될 때까지 그간의 研究實績과 教授能力 등을 감안해서 거듭되는 審査過程을 거쳐서 正教授에 升進될 수 있는 人物인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데 이 再任用制가 얼마나 착실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회의이다.

지금의 현실은 거의 99%가 일정한 時日만 흐

르면 正教授로 升進이 되는 제도로서 이것은 실제로 그러한 不適格者를 가려내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떤 제도로 99%를 그대로 通過시킨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軍人과 外交官人事에 階級停年制가 있는 것은 모든 將校나 外交官이 다 將軍이나大使가 될 수는 없다는 論理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大學教授 初任者(專講이든 助教授간간에)가 다 正教授가 될 資質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論理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어떤가? 그 正反對다. 누구도 오래 남아 있기만 하면 다 正教授가 되고 가끔 學長(요새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판에는)도 되지 않는가? 사람이 어떤 일을 시일적으로 長期間 反復했다고 해서 그의 資質이 향상되고 발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發展을 위해서는 計劃的・意圖的 活動이 요구된다. 이것이 大學에 있어서는 研究이다. 研究實踐이 없는 教授要員을 단순히 長期勤務만의 이유로 助教授에서 副教授, 副教授에서 正教授로 승진시키는 것은 韓國 大學教授의 職業을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쉬운 직업'으로 轉落케 한 것이 아닐지 反省해 봐야겠다.

3. 大學院 行政學教育

현재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行政學碩士 및 博士教育에 대해서 다음에 간략하게 적어 보겠다.

1) 大學院教育의 質的 評價制度 不在

일단 文敎部承認을 얻어서 碩士 이상의 학위를 줄 수만 있게 되면 어떤 대학이나 아무의 干涉이나 評價를 거치지 않고 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물론 文敎部의 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承認要件을 구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形式的(체계로는 書類上)要件을 갖춘 것에 불과하지 實質的인 內容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한 學位의 質的 統制가 없다. 이것은 비단 行政學科의 학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행정학의 原產地인 美國에서는 文敎部承認은 없으나 美國 NASPAA의 이른바 'Peer Group Review(同僚集團評價)'制度가 있

서 行政學碩士 및 博士學位의 質을 間接的으로
동제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2) 學位論文의 오리지널리티 不足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碩士 이상의 論文들을
구체적으로 調査研究한 集計는 아니지만 答者의
제한된 경향과 同僚教授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
리나라 碩士 이상의 論文에 '오리지널리티(獨創
性)'가 결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
은 여러 가지 原因을 들어 설명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行政학 研究方法의 韓國의 土着化가
아직도 優厚하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우리의 大部分이 外國의 方法論을 그대로 소
개는 하면서도 그러한 방법을 韓國이라는 환경
에 應用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制約點들을
體系的・具體的으로 찾아내서 이러한 제약 속에
서 가장 알맞는 研究方法의 導出이 아직도 試圖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예컨대 標本調查가 일반
적으로 좋은 社會科學研究方法이긴 해도 韩國의
여건하에서 과연 有效한 방법인지는 아직 아무
도 단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研究方法의 制約性 때문에 불가피
하게 우리 行政학의 연구는 주로 文獻調查를 통
한 歷史的・制度的 研究에 그치거나, 그렇지 않
으면 극히 허약한 標本에 근거한 現地調查일 경
우가 많다.

3) 碩士課程의 '인턴쉽' 不在

위에서 學部 教科課程 설명시 언급했으나 碩士
課程에 특히 '인턴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은 매우 중대한 교과목의 不實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官學協同과 行政學의 實用化에 절대로
필요한 教科課程인 것이다.

4) 碩士・博士學位수여자에 대한 職業 謀算 不在

이것 역시 大學이 學位만 수여하면 그들이 어
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도 된다는 無責任한 態度의 발로라고 하겠다. 궁
극적으로는 좋은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대학
만이 學位志望生을 빨게 될 것이다. 아직도 우
리나라에선 學位를 일종의 이력서 장식용으로 원
하는 사람이 많아서 職業과는 무관하게 학위를
추구하는 사람의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특히 博士학위를 들 때에는 博士학위
소지자의 고용시장 조사가 先行되어야 할 것
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行政학의 學問的 權威
와 質을 스스로 짓밟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行政學研究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
할 수 있겠다.

1) 韓國 行政學의 定立 노력 不在

導入된 지 30년을 헤아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도 韩國의 行政學을 정립하기 위한 努力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答者的 과문 탓인지 잘 모른다. 制
度的 理解(人事行政이나 財務總算論에서)는 어느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韩國의 行政行態를 설
명하고 政策이 어떻게 決定・執行・評價되는지
를 분석하는 研究는 아직도 매우 부진하다.

2) 學術論文出版審查制의 不實

지금 行政學關係 몇몇 學術誌가 있는데 여기
에 실리는 論文을 엄격히 審查하여 그 資格과 質
을 통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极히 形
式的이고 논문의 質의 統制가 잘 시행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學問發達에 极히 유감스러운 현상
이다.

익명에 의한 엄격한 심사제도야말로 論文의
질을 올립은 물론이고 이것을 통해 教授의 질을
間接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3) 非中央行政(non-national administration)

에 대한 研究의 不足

우리나라의 中央集權體制를 반영하는 하나의
현상은 우리 行政학의 研究對象이 거의 대부분
中央行政(national administration)에 국한되어
왔으며 非中央行政인 市・道行政이나 郡이나
市・邑・面의 行政에 대해서는 우리 學者들이
거의 無關心 또는 不誠實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이 절다는 것이다.

國民의 입장에서 보면 中央行政보다도 자기
살림에 가까운 地方行政이나 都市行政이 훨씬
중요하고 앞으로 이른바 '地方時代'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非中央行政에 대한 研究의 촉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III. 몇 가지 改善方案

그러면 우리나라 大學의 行政學科가 걸어가야 할 進路는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學士 및 碩士學位 教科目의 改編이다.

가. 學士學位核心科目 및 그 比重⁶⁾

- 가) 行政의 環境을 이해하기 위한 政治, 經濟, 社會 및 法律的 制度, 機構 및 過程
15~25%
- 나) 問題를 규명하고 解석할 수 있는 分析的, 計量的 및 非計量的 能力과 技法의 개발을 위한 과목과 意思疏通能力의 발달을 위한 과목
20~25%
- 다) 人間行態(個人, 集團 및 組織)를 이해하고 行態的 狀況을 級別하고 분석할 수 있는 能力과 技術의 발전을 위한 과목
10~15%
- 라) 政策分析
5~10%
- 마) 行政 및 管理의 體制 및 過程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
10~20%
- 바) 教養科目
15~25%

나. 碩士學位核心科目의 內容⁷⁾

- 가) 政治, 經濟 및 社會的 背景에 관한 과목
(가) 知識面
- 文化 및 社會的 傷習과 樣式
 - 政治的 價值와 過程
 - 政府機構, 權力 및 그 關係
 - 經濟的 體制, 動機 및 統制
 - 環境的 要因과 可用資源
- (나) 技法面
- 政治, 經濟 및 社會的 勢力과 주체를 분석하고 解석하는 과목
 - 政治, 經濟 및 社會的 知識을 公共問題의 解決에 적용하는 과목
 - 行政的 政策과 行爲의 結果와 政治, 經濟 및 社會的 영향을 평가하는 과목
- (다) 公共利益價值面

- 民主的 傳統과 實踐, 立憲主義 및 法治主義에 대한 知識과 公約

- 社會的・經濟的 發展을 촉진시키기 위한 道具로서 政府의 目的과 制約에 대한 지식과 공약

- 個人과 集團이 權力과 政策決定의 核心에의 接近에 대한 지식과 공약

- 行政과 行政人에 대한 政治的 指導와 責任에 대한 지식과 공약

- 公務員의 公的・私的 行動과 倫理에 대한 基準에 대한 지식과 공약
(라) 行態面

- 다른 사람과 다른 集團의 반대되는 見解를 포용하는 것

- 복잡한 政治社會的 環境과 狀況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

- 社會的 및 組織의 變動役軍으로서의 能力

- 公共行動事業(예컨대, 地域社會開發事業)에 참여하는 것

나) 計量的 및 非計量的 分析方法에 관한 科目

(가) 知識面

- 計量的 決定方法論(예컨대, 會計學, 統計學)

- 전자자료처리 및 情報體制

- 體制 및 節次分析(예컨대, 組織調查 및 作業測定)

- 行態科學方法論(예컨대, 社會測定學調查)

- 法律過程과 統制

(나) 技法面

- 論理的 分析과 診斷

- 研究計劃과 應用

- 컴퓨터 活用과 應用

- 組織體의 狀況에 대하여 計量的 및 非計量的 方法論의 適用

6)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in Public Affairs/Public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1976).

7)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Professional Masters Degree Programs in Public Affairs/Public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1974).

- 口述 및 書面意思疏通 및 發表
- (다) 公共利益價值面
- 公共業務의 집행에 있어서의 客觀性과 合理性
 - 公共目標의 달성을 위해서 科學과 研究를 활용
 - 公共의 必要와 問題에 대한 不偏不黨한 問議와 調查
 - 資料와 그 決定을 국민에게 意思傳達하고 解釋함에 있어서의 公開性
- (라) 行態面
- 資料수집과 問題解決演習에의 參여
 - 公共文書, 法的 出處 및 行政意思疏通樣式에 대한 익숙함
 - 書翰, 報告書 및 所見書의 準備
 - 專門職協會, 인턴쉽 및 기타 經驗의 教育方法에의 參여
- 다) 個人, 集團 및 組織의 動態에 관한 科目
- (가) 知識面
- 個人 및 集團行態(예컨대, 個人動機, ‘리더쉽’ 類型)
 - 組織構造, 過程 및 動態(예컨대, 權力)
 - ‘커뮤니케이션’ 理論과 過程
 - 專門性과 公共 ‘서어비스’
- (나) 技法面
- 個人的 動機와 ‘리더쉽’
 - 個人的 및 集團關係
 - 政治的 및 組織權力의 확인과 분석
 - 組織, ‘리더쉽’ 및 意思決定의 적절한 모형의 적용
 - 組織의 ‘스트레스’, 制約 및 變動에 대처해 나가는 것
- (다) 公共利益價值
- 個人的 權利, 自由 및 福祉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
 - 組織의 衡平性과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
 - 個人的 利益과 公共의 目的과 必要를 잘 조화하는 것
 - 組織이 봉사하는 顧客에 대한 關心
- (라) 行態面
- 人間 및 組織關係에 있어서의 一貫性, 誠實性 및 正直性
 - 個人的 發展과 組織의 發展을 위한 肯定的 姿勢
 - 他人과 自己의 意見과 經驗을 나누려는 意慾
 - 人間과 組織의 動機와 接近에 있어서의 多樣性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 專門職協會, ‘인턴쉽’ 및 기타 經驗의 教育方法에의 參여
- 라) 政策分析을 위한 科目
- (가) 知識面
- 公共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分析的行政的道具를 적용하는 것
 - 政策이 形成되고, 집행되어 평가되는 過程들
 - 政策代案을 最極化하고 선택하는 戰略들
 - 特定機能分野(예컨대, 保健, 交通 등)에 적절한 政策의 特殊한 属性들
- (나) 技法面
- 社會經濟的 分析(예컨대, 便益費用分析)
 - 政治的 診斷(예컨대, 與論評價)
 - 問題의 理解와 解釋
 - 政策測定, 計算 및 計劃
 - 事業計劃 영향 측정(예컨대, 프로그램評價)
- (다) 公共利益價值面
- 公共選擇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資料 사용 및 분석
 - 機會均等과 福利를 촉진시키는 政策과 ‘프로그램’
 - 公共政策과 그 영향에 대해 國民을 이해시키기 위한 조치
 - ‘프로그램’ 형성과 집행의 基準
 - ‘프로그램’의 여러 사람에 대한 便益費用을 공정하고 완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節次
 - 公共政策形成과 評價에 참여하는 顧客과 國民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

(라) 行態面

- 多樣한 要因을 共通目標로 풀는 능력
- 政治的 및 組織의 壓力과 制約에 적응하는 방법
- 협정하고,妥協하며 중재하는 능력
- 專門職協會, ‘인턴쉽’ 및 기타 經驗的 教育方法에의 참여

마) 行政的 및 管理的 過程에 관한 科目

(가) 知識面

- 行政企劃 및 組織計劃
- 管理體制 및 過程 ('리더쉽', 意思決定, 指導 및 組織發展 및 變動을 포함한)
- 充員, 訓練 및 集團協商을 포함한人事行政
- 財政과 豐算
- ‘프로그램’ 評價와 統制

(나) 技法面

- 概念化, 目標設定, 組織設計 및 프로그램 開發
- 作業配當 및 監督
- 協商과 說得
- 칭취, 評價 및 再檢討

(다) 公共利益價值面

- 公共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組織과 行政過程의 役割과 使用
- 公共業務執行에 있어서 能率性과 效果性의 基準
- 개인 및 조직의 正直性과 成果에

대한 基準

- 國民과 選舉된 代表에 의한 公共監視와 再檢討
- 個人의 達成과 公共信任을 얻는 데 유리한 作業環境

(라) 行態面

- 새로운 ‘아이디어’와 提案에 대한開放性
- 強點, 弱點 및 他人의 慾求를 인정하고 고려하는 것
- 여러 가지의 組織的 狀況과 問題에 管理道具와 過程을 適用하는 능력
- 組織 및 管理調查에 있어서의 效果性
- 專門職協會, ‘인턴쉽’ 및 기타 經驗的 教育方法에의 참여

위에 略述한 內容을 포함하는 教科課程을 작성하여 모든 碩士學位候補者는 물론 博士學位候補者도 모두 履修토록 함이 바람직하다(이상은 NASPAA의 行政學學位 ‘프로그램’ 指針 및 基準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둘째로 教授陣의 強化와 實績主義에 의한人事이다.

위의 問題提起에서 論한 대로 과도한 講義時間 부담, 實績과 무관한 勤務年限에 의한人事는 당연히 改善되어야 한다.

세째는 行政學의 韓國 土着化를 위한 研究支援이 있어야겠다.

네째는 官學協同의 制度化가 時急하다. *